

특집 | 메이지유신에 ‘동아시아 근대(성)’를 묻는다: 메이지유신 150주년 특집

메이지 일본 경제발전의 ‘복층성’(複層性): ‘근대’ 대(對) ‘재래’의 이원론을 넘어서 |

다니모토 마사유키

투고일자: 2018. 6. 5 | 심사완료일자: 2018. 6. 14 | 게재확정일자: 2018. 6. 21

본고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이 서구의 산업기술이나 제도의 이식을 의미하는 ‘근대적 경제발전’과 에도시대 이래의 ‘재래적 경제발전’이 복층적으로 전개되는 하이브리드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산업혁명’을 담당하는 리딩산업으로서의 면공업이 기계제 면사방적 회사와 농촌공업적 성격을 계속하는 재래직물업이라는 두 개의 다른 생산 형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구체적인 사례였지만, 그 배후에는 소농 경영의 노동력 배분전략이 있었으며 그것이 근대 부분으로의 노동력 공급행동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근세 이래의 자립적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자산가와 명망가가 산업자본의 공급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통해 토목이나 교육 등의 사회적 인프라 정비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 ‘소농사회’를 기초로 하는 복층적 경제발전은 20세기 후반까지 일본경제의 모습을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기능해가는 것이다.

주제어: 근대 경제성장, 재래적 경제발전, 복층성, 재래면직물업, 돈야제, 소농경영, 여성 노동, 무라, 지역사회, 지방자산가, 명망가, 지방재정

포스트-소라이학(徂徠學)의 맥락으로 읽는 도쿠가와 후기 사상사의 논점: 메이지 유학자들의 사상적 토대 | 이새봄

투고일자: 2018. 5. 28 | 심사완료일자: 2018. 6. 11 | 게재확정일자: 2018. 7. 3

메이지 초기에 활동한 유학자들의 사상적 기본 골격은, 그들이 청·장년기를 보낸 메이지 유신 이전의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유학 중심의 도쿠가와 사상사가 그 바탕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사상적 토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18세기 후반에서 메이지 유신에 이르기까지의 도쿠가와 사상사를 ‘포스트(post)-소라이학(徂徠學)’의 맥락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소라이학이 도쿠가와 유학사에 가져온 변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소라이학의 열풍이 지나간 후에 그로 인해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을 포스트-소라이학 시대에 전개된 사상사적 흐름이라 보고, 이것이 메이지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메이지 시대의 유학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메이지 시대나 그 직전시기만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쿠가와 후기 사상사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출발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도쿠가와 유학에 관한 이해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온 결과인지를 마루야마의 연구부터 시작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라이학이 도쿠가와 일본의 사상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후반 이후 나타난 도쿠가와 지식 사회의 특성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포스트-소라이학의 흐름 속에서 메이

지 유학자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게 될 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주제어: 소라이학, 메이지, 유학, 포스트-소라이학

국학의 메이지 유신: 복고의 착종으로부터 신도를 창출하기까지 | 배관문

투고일자: 2018. 5. 20 | 심사완료일자: 2018. 6. 4 | 게재확정일자: 2018. 6. 7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유신에 이르는 근대 전환기에 히라타파 국학은 ‘왕정복고’와 ‘진무 창업’의 기치 아래 이루어진 천황친정 체제에 복고신도 사상의 실현을 기대했다. 고대 율령제 시대의 태정관과 신기관 제도의 부활에 따라, 이들이 제정일치 국가를 꿈꾸며 구체적인 정치강령을 구상한 것은 야노 하루미치의 건백서 등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복고’를 선언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가제도의 창출이라 할 만한 대개혁이 시작되자, 이들은 곧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만다. 근대적 신기 행정과 제도 정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오키키 다카마사, 후쿠바 비세이 등의 쓰와노파 국학자들이었다. 여기에 이른바 히라타파 국학의 패배와 좌절이 확인된다. 시마자키 도손의 유명한 역사소설 『동트기 전』이 보여주는 것도 거의 그에 가깝다. 확실히 대교선포 운동과 제신 논쟁에 이르기까지 국학자들이 그리는 ‘복고’는 서로 대립하고 복잡하게 착종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히라타파 국학의 영향력이 설령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었다 해도, 다양한 갈래의 국학 사상이 일원화되면서 이후 국가신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그것은 신사 비종교론을 표명하면서도 천황제와 표리일체를 이루듯, 다분히 정치적인 상황과 결합되어 있었다. 일례로 요시오카 노리아키의 『고사기전략』은 당시 국학의 합리화 및 단일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것은 메이지의 건국신화이자 기원신화가 수렴된다는 점에서 메이지 초기 『고사기전』의 수용의 일면이 아니라 그 자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히라타 아쓰타네, 야노 하루미치, 오키키 다카마사, 복고신도, 국가신도

국가라는 신체에서 전통과 근대는 어떻게 만나는가: 가이에다 노부요시의 인체 그림을 중심으로 | 김태진

투고일자: 2018. 5. 18 | 심사완료일자: 2018. 6. 6 | 게재확정일자: 2018. 6. 8

가이에다가 슈타인의 강의를 들으면서 남긴 〈인체배당도〉라는 그림은 인체의 각 부위를 각각의 국가 기관에 대비시키고 있다. 이는 슈타인이 설명했던 유기체설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황을 머리로 하는 신체로서의 국가상은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서양의 중세유기체설의 영향으로 파악했으나 오히려 그 논리적 구조 자체로 보았을 때 전통적인 동양의 신체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이에다는 슈타인이 인격에 대한 비유로서 국가를 법인화하려는 시도와는 달리, 오히려 전통적 사유 양식과의 친연성을 슈타인의 유기체설에서 발견했던 것일지 모른다. 이는 슈타인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슈타인의 사상을 ‘전유’(appropriation)했다고도 볼 수 있다. 슈타인과 같은 행정-입법-군주의 세 바퀴를 축으로 셋이 균형을 이루는 신체로서가 아닌 각 장부의 역할이 자기의 역할을 할 때, 특히 인민이 강조되는 모습 속에서 두뇌의 통합성이 강조되는 신체를 보이게 된다. 또한 수신과 치국의 논리의 동일성이 말해주듯 ‘내부’를 강화시키는 원리로서 양생론이 두 논리를 동일하게 관통하고 있다. 이것이 전통적 신체관의 논리가 서양의 유기체론과 만나 이상한 형태의 그림을 낳게 한 이유였다.

주제어: 가이에다 노부요시, 로렌츠 폰 슈타인, 신체정치, 근대, 유기체설

메이지미술과 일본의 ‘근대’: 메이지미술회를 중심으로 | 오윤정

투고일자: 2018. 6. 11 | 심사완료일자: 2018. 6. 25 | 게재확정일자: 2018. 6. 26

메이지미술회는 1889년 양풍미술가들이 대동단결 결성한 단체이다. 결성을 주도한 인물은 메이지 정부가 서양미술 교육을 위해 1876년 설립한 공부미술학교 출신의 화가들이었다. 공부미술학교에서 이들은 사실적 묘사에 탁월한 서양미술을 일본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의 하나로 학습했다. 그러나 도쿄미술학교를 시작으로 문부성미술전람회 등의 제도를 통해 기술과 미술을 분리하는 근대 서구의 분류체계에 준거한 미술 규범이 보편화되면서 미술을 실용기술로 이해한 공부미술학교·메이지미술회 계열 미술가들의 미술에 대한 인식은 서구로부터 ‘미술’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본적 오류로 평가되어 왔다. ‘예술’로서의 미술이 규범화되면서 미술사 역시 서구 근대의 미술 관념과 체계에 따라 심미적 ‘예술’로서의 미술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실용적 ‘기술’로서의 미술은 주변화 혹은 삭제되었다. 서구와 같은 물리적 합리성에 근거한 과학기술의 진보를 갈망하는 당시 메이지 일본에게는 사실성이 근대화의 도구로 가장 긴급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서양미술의 속성이었고 일본의 양화가들은 이를 서양으로부터 배워와야 할 ‘기술’의 하나로 내적 필요에 따라 전용했다. 그러나 미술의 근대성이란 맥락에서 메이지초로 이어지는 “실용의 기술·치술의 도구”라는 미술 인식을 일본 특수적인 것, 결국 ‘비근대적’인 것으로 분리하고 배제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다.

주제어: 메이지미술회, 공부미술학교, 사실성, 에도 양풍화, “양화의 동면”

강박과 히스테리 사이, 메이지 유신과 동아시아의 근대성: 시마자키 도손, 루쉰, 염상섭 | 서영채

투고일자: 2018. 7. 2 | 심사완료일자: 2018. 7. 10 | 게재확정일자: 2018. 7. 26

이 논문은 메이지 유신 150주년을 화두로 하여, 근대성이라는 타자에 맞닥뜨렸던 동아시아의 마음에 대해 살피기 위해 쓰인다. 이를 위해 나는 백여 년 전 동아시아 삼국의 문학작품, 시마자키 도손과 루쉰, 염상섭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정신 질환을 대조하고 기술한다. 나는 두 개의 피해망상과 한 개의 과대망상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며 그것이 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쓴다. 메이지 유신 150주년이라는 말은 동아시아 근대성 150주년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래적인 것으로서의 근대성은 그것과 조우하는 사람들에게는 타자가 지니는 두려움과 함께 다가온다. 근대가 환기하는 내면성의 순수한 가치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칠고 추악하기까지 한 현실 사이의 알력이 한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이상 심리의 공간으로 몰아간다. 게다가 그 바탕에는 근대성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윤리적 뒤틀림, 곧 공리주의라는 기묘한 현실 원리가 비윤리적 윤리의 형태로 기층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층을 이룬 위에서, 근대로의 전환기 동아시아라는 공간 전체를 놓고 보자면, 거대한 역사적 타자와 맞닥뜨린 사람들의 마음은 강박과 히스테리 사이에서 찢어져 있다. ‘대학담론’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메이지의 근대화 과정과 또한 그 귀결로서의 태평양 전쟁이 그것의 가장 뚜렷한 표현이다.

주제어: 메이지유신, 동아시아의 근대성, 시마자키 도손, 루쉰, 염상섭, 강박증과 히스테리, 대학담론

특별기고

국문학 논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의 국가, 사회, 행위자 | 김영민

투고일자: 2018. 5. 13 | 심사완료일자: 2018. 6. 8 | 게재확정일자: 2018. 6. 21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국문학 논쟁(이언진 해석 논쟁과 한글 소설 유통 논쟁)은 특정 시기 작품 해

석이나 작품 유통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구체적인 논의에 기초하면서 한국사 전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그 뿐 아니라, 논자들이 문학에서 출발하여 사회사 혹은 정치학까지 언급하니 만큼, 많은 이들이 그 필요성을 역설해온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논의의 장이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국문학계 해당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을 통해, 조선 후기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 안을 살아가는 행위자의 이해에 한발자국 다가가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문학에서 정치에 이르는 또 다른 경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의 독해에서 조선 후기의 정치적 동학의 이해에 이르는 대안적인 경로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이언진, 한글 소설, 조선 후기, 국가, 사회

연구논단

세계사와 포월적 주체: 고야마 이와오의 역사철학과 근대비판 | 장인성

투고일자: 2018. 6. 12 | 심사완료일자: 2018. 7. 7 | 게재확정일자: 2018. 7. 13

이 글에서는 고야마 이와오(高山岩男, 1905~1993)의 역사철학과 주체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1930년대, 1940년대 일본에서 제국과 전쟁 상황의 현실에 대면했던 교토철학의 사상적 영위 내용과 특질을 밝히고 있다. 교토학파의 역사철학은 일본근대철학의 자연적 추세(시간성) 위에 세계사의 혁명적 재구성(공간성)이 부과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교토학파의 세계사철학에서 자연과 작위를 연결하고 시간과 공간을 결합시킨 계기는 전쟁이었다. 고야마는 유럽세계를 하나의 근대적 세계로 상대화하는 한편, 유럽 중심의 국제질서를 수정하고 일본의 역사적 세계가 포함된,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사적 세계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또한 역사적 세계와 세계사적 세계를 지탱하는 서양문화와 동양문화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했다. 고야마는 유럽의 근대와 근대국가를 부정했지만 근대성 전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개체적 책임주체와 자주적 정신을 중시하는 한편, 일본적 가치가 투사된 동양정신으로써 동서양의 포섭적 초월을 추구하였다. “이성을 포월하는 인간의 철학”을 지향하였다.

주제어: 고야마 이와오, 교토철학, 주체/주체성, 유럽근대 비판, ‘세계사적 세계’/‘역사적 세계’, ‘포월’, 제국과 전쟁

‘전재민’(戰災民)에서 ‘피폭자’(被爆者)로: 일본 원폭피폭자원호의 제도화와 새로운 자격의 범주로서 ‘피폭자’의 의미 구성 | 오은정

투고일자: 2018. 6. 20 | 심사완료일자: 2018. 6. 27 | 게재확정일자: 2018. 7. 3

본고는 패전 직후 일반의 전재민(戰災民)과 구분되지 않았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이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제도화에 따라 ‘피폭자(被爆者)’, 즉 ‘히바쿠샤’로 규정되어온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패전 직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도 ‘살아남은 사람들’ 즉 ‘원폭생존자’는 구호의 측면에서는 ‘일반의 전재민’들과 동일한 범주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비키니피해 이후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가 빠르게 법적·행정적 제도화 과정에 들어섰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원폭장해자’, ‘원폭환자’ 등의 용어가 아닌 ‘원폭피폭자’라는 행정관료제적 명칭이 중요하게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그 실행과정에서는 일본국의 영토, 그리고 원자폭탄의 피해가 전쟁으로 인한 ‘일반의 피해’와 구분되는 ‘특수한 피해’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수인론(受忍論)과 균형론(均衡論)이 중요하게 내세워졌다. 이렇게 커다란 두 축의 움직임은 일본에서 ‘피폭자’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와 법적 규정이 과거 일본국이 수행한 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피해를

초래한 원인도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오직 원자폭탄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한정되는 것, 즉 제국 일본이 수행한 전쟁의 책임이 소거(消去)되는 과정으로 틀 지워짐을 의미한다.

주제어: 피폭자, 전재민, 제국 일본, 전쟁책임, 수인론, 균형론

수폭괴수 고질라의 탄생과 특촬 테크놀로지: 제국과 포스트제국의 단속적 선율 | 이경희

투고일자: 2018. 6. 26 | 심사완료일자: 2018. 7. 6 | 게재확정일자: 2018. 7. 13

이 논문에서는 특촬영화 <고질라>(1954)의 탄생 서막을 재조명했다. 이로써 제국 일본의 문화권력을 지탱했던 테크놀로지가 전후 일본의 '수폭괴수'와 결합하며 포스트제국으로 이행한 단속적 선율과 그 문화적 함의를 규명했다.

특수촬영기술(SFX)은 전쟁·프로파간다 영화를 보조하며 제국 일본에 '헉헉한' 공을 세웠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은 특촬 테크놀로지 향상에 다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촬(SF)의 전후 과정은 그 핵심적 장면들(폭격, 격파, 침몰, 파괴 등) 속에 전후의 새로운 이념을 녹여냄으로써 전전과의 단절을 체화하는 것이었다. 그 가능성은 비키니환초의 수폭실험과 후쿠마루사건을 모티프로 한 '수폭괴수'와 조우하면서 열렸다. 특촬과 '수폭괴수'의 결합에는 전후 세계의 역사적 사건과 사고와 우연들이 얹히면서 <고질라>는 제국의 이데올로기나 이원론적 대립 구도 너머로 다음과 같은 불확정적 상징성을 획득했다.

첫째, 고질라는 수폭실험의 피해자면서 난폭한 파괴자, 정당한 고발자면서 잔혹한 가해자, 소외된 외부자면서 잠재된 내재자라는 복합적 양가성·다의성을 띠게 됐다. 둘째, '수폭괴수'와 결합한 특촬 테크놀로지는 문명비판(공포) vs 오락(애교)을 횡단하며 제국 일본의 문화권력에서 포스트제국 일본의 문화 콘텐츠로 거듭났다. 셋째, 미국영화의 '재탕'이면서 일본영화로서는 최초로 브로드웨이와 세계시장을 제패함으로써, 원작(전승국) vs 모작(패전국)의 우열론적 대립구도를 해체했다. 그리고 이는 제국의 문화권력과 유착 관계 속에서 영화의 보조적 위치 머물던 전전의 특촬 테크놀로지를 영화의 중심에 두고자 했던 제작 의도의 또 다른 결과였다.

주제어: 고질라(1954), 특촬 테크놀로지, 수폭괴수, 양가성, 제국과 포스트제국

아베정권 시기의 외교·안보에 대한 여론과 정책 | 경제희

투고일자: 2018. 7. 4 | 심사완료일자: 2018. 7. 9 | 게재확정일자: 2018. 7. 14

본 연구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통해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의식과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정책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정치가와 시민을 구분하고 역사 및 영토 문제와 외교·안보 이슈를 분리하여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의식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여론 조사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민간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관계, 안전보장 및 평화, 헌법개정·자위대·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제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2012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조사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여러 원인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는 높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방향의 정책은 선호하지 않는 시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차 아베내각이 들어선 이후 그러한 의식의 경향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은 다수의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 의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제어: 일본 시민, 여론, 외교·안보, 안전보장, 평화, 헌법개정, 자위대, 집단적 자위권, 아베정권